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360-5050

김홍빈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성공 ▶2 | 왜곡·반쪽…5·18 33주년 결산 ▶7 |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 생태자원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90호 1판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음력 4월 12일)

'5·18 왜곡과 전쟁' 정부·정치권 나서라

5·18 특별법 개정…강력한 제재안 마련해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양상이 도를 넘으면서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5·18 민주화운동 왜곡의 근간에는 뿌리 깊게 형성된 이념적 갈등, 망국적 지역구도 등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감한 해법을 제시, 국민대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일간베스트 등 막말 사이트와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왜곡 보도와 관련, 광주의 민심은 강한 분노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막말 사이트와 종편의 왜곡 보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언론과 인터넷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역사적 진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에 두 손 놓고 있는다면 사실상 이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의 근간에 호남에 대한 지역적 차별과 극우 진영의 대결적 구도가 얽혀 있는 만큼 영남 및 보수 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5·18 왜곡 사태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지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의 길을 열고 이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도 보다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집권 여당이자 보수를 근간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사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극우 진영의 반발 등을 고려, 이번 사태를 방관한다면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으로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기 국면에서만 호남을 찾는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민주당도 이번 왜곡 사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전국 시·도당을 통해 역사 왜곡의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당 차원의 캠페인에 나서는 등 당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왜곡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헌법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번 왜곡 사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형형색색 캠퍼스의 장미정원

20일 오후 수십만 송이 장미가 앞다퉈 피어나 장관을 이룬 조선대학교 장미원을 여학생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 조선대 '제11회 장미축제'는 오는 24~25일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 다시 지역민에게로'를 주제로 교내 장미원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1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폄하·왜곡은 국기문란 중대범죄"

광주시·민주당 대책위원회 구성 법적대응 나서

광주시와 민주당이 최근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5·18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종편은 탈북군인이라는 사람을 불러 북한군이 5·18을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일베'로도 불리는 일간베스트라는 이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5·18 희생자를 모셨던 관이 있는 사진위에다 '홍어포장', '택배' 등의 글을 써놓는 등 고인들의 영혼까지 모독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강 시장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자진해서 폄하·왜곡 행위를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유포, 정보통신관련법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와 시의회, 교육청, 5·18 기념재단,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5·18 폄하 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인터넷과 종편 등의 사례를 모두 모아 적극 대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기정의원을 위원장에,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과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18을 왜곡하는 시도가 단순히 특정 진실을 왜곡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피눈물을 흘렸던 많은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중대 범죄이고, 민주주의의 헌정질서까지 어지럽히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경고에도 이날 '일베' 사이트에는 5·18을 '폭동절'로 지칭하는 등의 글들이 난무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장기불황에 자영업 붕괴 가속

폐업 속출…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 30년來 최저

#15년 동안 광주시 광산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해온 정모(42)씨는 지난해 11월 가게를 접어야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종업원 수를 줄였지만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혼자 근근이 꾸려가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폐업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종업원을 여러명 쓰는 등 형편이 좋았던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두드러졌으며 도소매업 업종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510만3000명 중 22.8%를 차지했다. 이같은 비율은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3년 4월 이후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1983년 4월 자영업자 수는 509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1489만6000명 중 34.2%였다.

4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명 줄었다.

이처럼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이 4월 기준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경제동향에서 1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창업대비 폐업 비율이 85%로 집계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 가운데 폐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은퇴세대 자영자들이 선호하는 요식업(94.3%)이 차지했다. 치킨과 피자가게 등 '동네업소' 10곳이 신장개업을 했다면 9곳 이상은 경영악화로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어 실업률 증가와 취업 경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순감 9만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줄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4만명)보다 많았다.

북구 운암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최모(57)씨는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임대료까지 올려 달라는 통에 종원업 월급은 커녕 가겟세도 마련하지 못해 가게를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자영업 부문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배상문 PGA 첫 우승
한국인 세번째 챔피언
▶14면

여수 죽림 「사랑으로」 부영 B2·C1
아파트 2,206세대 임대분양!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납부안내 (금액단위:만원)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수	임대 시행가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입주 (예정일)	문 의 전 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B2	59㎡	390	5,300	19	1,000	2,000	2,300	2014년 1월	061) 682-4827 682-4829
	84㎡ (A형)	710	6,500	30	1,000	2,000	3,500		
	84㎡ (B·C형)	240	6,700	30	1,000	2,000	3,700		
C1	59㎡ (A·B·C형)	866	5,000	21	1,000	2,000	2,000	2014년 4월	

※상기 금액은 기준층 기준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 : 1개월

교통환경: 덕양로, 도원로가 도심으로 바로 연결되며, 순천~완주간 고속도로는 물론 국가산단 연결도로 등이 예정된 특급 교통지역 입니다.

생활환경: 여수시청, 여천전남병원, 농협, 마트, 우체국, 여천동주민센터, 성산공원 등 생활편익시설이 인접한 특급 생활지역 입니다.

교육환경: 성산초, 무선초, 도원초, 안산중, 삼일중(예정), 여천고, 부영여고 등 풍부한 교육인프라가 조성된 특급 교육지역 입니다.

미래가치: 여수엑스포의 문화인프라는 물론 여수예울마루, 여수해안길, 오동도, 금오도, 거문도, 돌산대교, 향일암 등의 휴양지를 누리는 특급 문화지역 입니다.

전·후면 발코니 확장 시공 (새시 포함)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http://yeosu.booyoung.co.kr
※모델하우스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1-3
(주) 부영주택

여수 죽림 B2 B/L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30번지(죽림택지개발지구 B2 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4~15층 21개동 1,3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금관리 : 시행사 자체관리 • 시행 및 시공 : (주)부영주택
여수 죽림 C1 B/L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11번지(죽림택지개발지구 C1 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5층 12개동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금관리 : 시행사 자체관리 • 시행 및 시공 : (주)부영주택